

# 韓國經濟의 成長과 均衡의 課題

郭 承 滌\*

## <目 次>

- I. 序 論
- II. 韓國經濟의 發展過程과 現況
- III. 均衡과 衡平의 문제
- IV. 向後의 課題
- V. 맺는말

## I. 序 論

과거 20년동안 韓國經濟는 괄목할 만큼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천을 이룩하였다. 1962년부터 1987년까지 25년간 平均으로 8%를 넘는 높은 경제성장율을 달성하여 우리경제는 開發途上國家에서 中進國으로 일대 비약을 하게 되었다. 經濟開發初期에는 상당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수반했지만 1980년이래 物價安定化에 주안점을 둔 일련의 金融・財政政策의 결과 최근에는 2~3%의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이룩하였다. 輸出主導인 産業構造로의 변천과 3低 등의 國際與件變化에 힘입어 경상수지 역시 적자상태로부터 흑자상태가 되어 우리경제는 高成長・高外債의 경제로부터 高成長・低外債의 경제로 전환하였다.

최근에는 미국 등 先進國의 國際收支惡化와 이에 따른 국제환경은 우리경제가 높은 經常收支黑字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던져준다. 對內的으로는 정치적 민주화가 고조되고 정착되는 과정에서 성취한 經濟發展의 成果를 어떻게 生活水準의 改善으로 활용하며 계속적인 成長을 도모할 수 있는냐에 지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에 있다. 특히, 우리경제가 각 부문간에 바람직한 均衡

\* 著者は 美國 Howard大學의 經濟學教授이며 본 論文은 韓國經濟研究院의 招聘研究員 및 서울大 經濟學科의 交換教授로 있으면서 작성하였다. 本 本論의 內容은 全적으로 著者の 見解이며 本 論文을 작성하는데 있어 白三哲君과 朴秀澈君의 도움이 컸다.

狀態(balanced state)에 있는가 그리고 성장의 경제적 惠澤이 經濟活動에 參與한 경제 각 단위간에 衡平하게 分配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經濟發展의 중요한 目的에 대한 의문일 뿐만 아니라 社會의 安定에 관한 질문임에 틀림없다.

均衡속에서 선진화하고 성장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우리경제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주고자 본고에서는 이때까지의 성장양상을 관찰하고 均衡化속에서의 성장을 위해 必要하다고 看做되는 方向을 제시하는데 主目的이 있다 하겠다. 제 2 장에서는 1960년부터 1987년까지의 經濟發展過程과 現況을 간단히 서술한다. 제 3 장에서는 不均衡狀態에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와 같은 不均衡이 초래된 理由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룬다. 제 4 장에서는 우리경제가 보다 만족스러운 均衡狀態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政策方向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 5 장에서는 本稿의 중요한 점을 要約하고 成長과 均衡의 相互關聯性에 관하여 서술함으로써 本稿를 끝맺고자 한다.

## II. 韓國經濟의 發展過程과 現況

다른 나라의 성장과정과 마찬가지로 과거 20년동안의 우리 經濟는 巨視的으로나 微視的으로 관찰할 때 매우 복잡한 양상과 기복을 가지고 成長하여 왔던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sup>1)</sup> 우리의 주된 관심은 成長과 均衡問題에 있으므로 이를 이해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成長과 產業構造, 國際收支 및 貿易, 物價와 所得分配 등을 서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1. 成長과 構造

우리경제는 1967년부터 1987년까지 年平均 9%로 成長하였다(<表 1>). 제 2 차(1967~1971)와 제 3 차(1972~1976) 경제개발 5 개년계획기간동안 성장율은 9.6%였다. 제 4 차경제개발계획기간(1977~1981)에는 성장율이 6%수준으로 다소 둔화되었으나, 제 5 차경제개발계획기간(1982~1986)에는 8.6%로 다시 상승하여 최근 1986~1987년 동안은 과거보다 훨씬 높은 12%의 比率로 성장하였다.

고도의 成長과 더불어 經濟構造도 괄목할 만큼 변화되었다. 農林漁業部門은 상당한 기복을 보이면서 平均 2%의 상당히 낮은 比率로 성장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製造業部門은 8%의 높은 比率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다소 성장율이 둔화되는 양상

1) 韓國經濟의 發展過程과 問題點에 대하여 林元澤, 邊衡尹, 趙淳 등(1987)과 郭承澤과 李榮善(1984) 參照.

〈表 1〉 産業別 成長率

%

계 획 기 간	경제성장률	농림어업	광 공 업	제 조 업		SOC기타
				경 공 업	중화학공업	
67~71 평 균	9.6	1.5	19.8	16.1	26.4	12.4
72~76 평 균	9.7	6.2	18.1	16.3	22.4	8.3
77~81 평 균	6.1	0.2	10.3	8.4	13.6	4.2
82~86 평 균	8.6	3.7	10.2	6.8	13.3	11.9
87	12.0	-4.3	15.6	10.5	20.4	13.8

『국민소득계정』과 『경제통계연보』, 한국은행

\* 제조업은 생산액기준, 나머지는 부가가치기준

〈表 2〉 生産構造의 變化推移

%

	1965	1970	1975	1980	1985	1986
농 립 어 업	42.9	29.6	24.0	14.4	14.2	13.3
광 업	2.0	2.1	1.9	1.4	1.4	1.3
제 조 업	11.1	15.5	22.6	29.6	30.7	32.3
건 설 업	3.1	7.0	6.7	8.3	8.7	8.3
서 어 비 스 업	40.2	45.8	44.8	46.3	45.0	44.8

『산업연관표』와 『국민소득계정』, 한국은행

을 나타내고 있지만 각 산업의 성장율이 상이하게 나타난 결과로 農林漁業部門이 全産業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實質附加價值基準으로 1965년의 43%에서 1986년에는 약 13%로 低落되는 반면 製造業部門의 비중은 계속 상승하여 1986년에는 30%에 이르렀다. 서어비스部門의 비중은 큰 변화없이 45%수준에 머무르고 있다(〈表 2〉). 총괄적으로 볼 때 제조업부문과 서어비스부문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됨에 따라 雇傭 역시 제조업과 서어비스업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1985년 약 67%). 그러나 제조업부문은 고용창출도가 낮은 자본집약적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GNP成長率當 雇傭增加率은 1970년대의 0.5%로부터 1980년대의 0.3%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需要側面에서 輸出部門과 內需(非輸出)部門이 경제성장에 사후적으로 공헌한 정도를 보면 수출부문이 내수부문에 비해 成長에 대한 貢獻度가 컸다. 1986~1987년 동안 수출부문의 공헌도는 훨씬 높게 계산되었다(〈表 3〉). 所得水準增大과 더불어 家計의 消費支出양상 또한 변화였다. 식품·의료·신발 등의 非耐久財에 대한 지출의 총소비지출에 대한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가계시설 등의 내구재와 의료·교육 등의 서어비스에 대한 지출비율은 상승추세를 보여준다(〈表 4〉). 우리 消費構造의 변천은 앵겔의 법칙(Engel's Law)을 그대로 반영하는 추세이

〈表 3〉 輸出部門과 內需部門으로 나눈 實質經濟成長率

%

	72~76 평균	77~81 평균	82~86 평균	85	86	87
수출부문	5.4	3.8	4.5	0.8	9.8	10.1
내수부문	4.5	3.0	4.0	4.6	2.1	0.8
경제성장율	9.8	6.7	8.5	5.4	11.7	10.9

『국민계정』과 『경제통계년도』, 한국은행

\* 실질경제성장율을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으로 나눈 것으로 수출부문은 수출액증감분을 전년도 국내총생산액으로 나눈 것( $\Delta X/ \text{GNP}(-1)$ )이고, 내수부문은 국내총생산액에서 수출액을 뺀 것( $\text{GNP}-X$ )의 증감분을 전년도 국내총생산액으로 나눈 것( $\Delta(\text{GNP}-X)/ \text{GNP}(-1)$ )임. 따라서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의 합이 경제성장율이 되며 이는 단순한 계산상의 수치이지 어떤 인과관계를 함축하고 있는 것은 아님.

〈表 4〉 家計實質消費支出 構成의 變動

%

	72~76 평균	77~81 평균	82~86 평균	85	86	87
내구재	1.5	3.1	4.5	4.6	5.3	6.3
준내구재	12.9	13.9	11.8	11.5	11.5	11.6
비내구재	59.7	56.5	54.1	53.3	53.2	52.4
서비스	25.9	26.5	29.6	30.6	30.0	29.7

『국민경제』, 한국은행, 1987.

〈表 5〉 資本, 勞動 및 技術의 成長에 대한 寄與度

%

	63~82 평균	63~72 평균	72~82 평균
경제성장율	8.13(100.0)	8.23(100.0)	8.02(100.0)
노동	2.92 (35.9)	2.74 (33.3)	3.04 (37.9)
자본	1.58 (19.4)	1.14 (13.9)	2.10 (26.2)
기술	3.63 (44.6)	4.35 (52.9)	2.88 (35.9)

KIM K.S. and J.K. PARK, 1985.

\* ( )안의 수치는 구성비임

다. 성장율을 生産供給側面에서 보면 자본보다 기술과 노동요인이 경제성장에 크게 공헌하였음을 보여준다(〈表 5〉). 특히 교육 등을 감안한 知識과 技術은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 2. 國際收支와 貿易構造

1977년을 제외하고 1967년부터 1985년까지 經常收支는 적자상태였다. 제 2 차 경제개발기간동안에는 경상수지적자가 26億달러였다. 原油價格과 國際利子率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제 4 차 개발계획기간의 마지막 해인 1981년에는 46億달러의 적자를 내었다. 그러나 1982년부터 경상수지적자는 점차적으로 감소되어 제 5 차 개발계획

〈表 6〉 國際收支 變化推移

백만달러

	67~71	72~76	77~81	82~86	87
경 상 수 지	-2,650.7	-4,903.2	-15,190.7	-1,898.6	9,853.7
GNP對比率	(-7.8)	(-5.3)	(-4.9)	(-0.7)	(8.3)
무 역 수 지	-4,369.5	-5,338.6	-14,665.3	-1,206.9	7,659.0
자기자본수지	2,241.5	4,683.2	10,840.3	368.7	-5,835.8
기 초 수 지	-409.3	-220.0	-3,630.4	1,788.4	4,018.1
종 합 수 지	6.4	552.8	-4,247.1	-3,608.1	5,202.1
외    채	1.6	8.5	27.2	46.8	35.6
GNP對比率	(20.4)	(40.9)	(45.1)	(56.2)	(30.0)

『경제백서』와 『주요경제지표』, 경제기획원

『경제통계년보』, 한국은행

\* 외채의 67~71, 72~76, 77~81, 82~86에 해당하는 수치는 각각 1970, 1975, 1980, 1985의 통계치이며 10억불 단위이다. ( )내의 숫자는 %임.

기간의 마지막 해인 1986년에는 46億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고 1987년에는 보다 높은 약 100億달러의 흑자를 실현하기에 이르렀다(〈表 6〉).

경상수지의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국제수지중 綜合收支는 경상수지보다 대체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다. 제 2 차 계획기간에는 거의 균형상태를 유지해 오다가 1967~1976년 동안에는 적은 액수이지만 흑자를 보였으나 제 3 차 그리고 제 4 차 계획기간에는 약 40億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종합수지가 경상수지보다 적다는 사실은 海外資本이 流入되었음에 연유한다. 1970년말 總外債殘額은 16億달러였으나 1985년말에는 467億달러로 증대되었다. 그러나 1986년과 1987년의 經常收支黑字 결과로 총외채의 규모가 1987년말 현재 356億달러로 감소하였다. 外債額의 對GNP當比率이 가장 높았던 것은 1980~1985년 동안의 50%선이며 1987년에는 30%로 하락되어서 外債가 가져올 수 있는 危險性이 우리 經濟規模에 비하여 낮은 상태임을 지적해 준다 하겠다.

우리경제의 경상수지의 추세는 근본적으로 무역수지의 추세를 따른다. 무역수지는 수출과 수입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小規模 開放經濟인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수출이 우리의 생산능력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産業構造가 변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輸出構造는 1960년대에는 1次產品이 주된 품종이었으나 최근에는 工產品이 주요품목으로 변화했다. 공산품중에서도 輕工業製品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重化學製品의 중요성이 커지는 양상을 나타내었다(〈表 7〉). 우리의 주된 수출상품이 製造業製品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수입은 원유를 포함한 原資材가 수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資本財와 消費財의 수입이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출입을 地域

〈表 7〉貿易構造의 變化推移

10억弗, %

		1970	1975	1980	82~86	1986	1987
수 출 액		0.8	5.0	17.5	28.0	34.7	47.3
구 성 비 (%)	경 공 업 제 품	68.8	56.5	48.4	39.0	40.9	41.0
	섬 유 류	40.8	36.2	28.2	17.5	22.4	21.4
	중 화 학 제 품	13.6	26.1	41.6	57.7	55.5	55.5
	철 강	3.8	7.2	14.5	7.5	6.0	5.5
	기 계	1.0	1.5	2.7	2.6	2.9	3.4
	전 기 · 전 자	5.3	8.7	9.4	15.6	20.4	23.0
수 입 액		1.9	6.7	22.3	28.7	31.6	41.0
구 성 비 (%)	원 자 재	63.6	56.3	47.8	58.2	54.3	54.9
	원 유	6.7	17.5	25.2	18.7	10.6	9.0
	자 본 재	29.7	26.2	20.2	26.9	35.9	35.5
	소 비 재	—	—	8.9	4.2	9.8	9.6
무 역 대 대	수 지	-1.1	-1.7	-4.4	-0.2	4.2	7.6
	미 국	-0.2	-0.3	-0.3	3.5	7.4	4.3
	일 본	-0.6	-1.1	-2.8	-3.2	-5.4	-5.2

『경제통계년보』, 한국은행

\* 82~86수치는 연평균치임.

別로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은 美國과 日本에 집중되어 있다 하겠다(1985년에 일본, 미국으로의 수출은 각각 총수출의 15%, 36%이고 일본,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각각 총수입의 24%, 20%였음).

과거 20년동안 우리의 對美貿易收支는 흑지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1987년에는 약 100億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와 반대로 對日貿易收支는 계속 적자를 나타내었고 1987년에는 약 50億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무역수지의 地域別 分布는 우리가 日本으로부터 도입한 기계와 가공품을 가지고 상품을 생산하여 美國 등의 국가에 수출하는 加工·組立型 貿易型을 가지고 발전하였음을 반영한다.

### 3. 物價와 賃金

우리경제의 개발과정 초창기에 있어서는 生産·供給能力不足과 需要上昇으로 인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物價上昇을 경험하였다. 1972~1981년동안 物價上昇率은 도매물가나 소비자물가로 볼 때 연 20%를 훨씬 초과하는 높은 수준이었다(〈表 8〉). 그러나 1982년부터는 物價가 급속도로 安定化되었다. 도매물가로 본 인플레이션은 약 1%수준으로 소비자물가로 본 인플레이션은 약 3%수준으로 안정되었다. 이와

〈表 8〉 勞賃과 物價變動

%

	66~71 평균	72~76 평균	77~81 평균	82~86 평균	86	87
임금	—	41.2	47.8	13.2	9.2	11.2
도매물가	11.6	29.0	28.4	0.9	-1.5	0.5
소비자물가	20.2	21.3	26.6	3.8	2.8	3.0
수입물가	1.9	17.3	14.8	-3.5	-6.7	10.9
명목대미환율	7.4	5.9	8.9	4.6	-0.3	-0.7

『경제통계연보』, 한국은행

〈表 9〉 職種別・性別・學歷別 月平均賃金

萬원, %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직		생산직		서비스직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975년										
중졸이상	5.7	2.7	10.2	5.3	6.3	2.6	4.3	2.3	4.1	2.1
고졸	7.4	4.4	13.5	6.8	7.5	4.3	5.4	2.9	4.7	2.9
대졸이상	10.9	7.8	19.6	12.5	12.5	7.7	8.1	4.5	6.0	4.5
1980년										
중졸이하	21.2	10.5	34.4	26.2	20.8	12.0	16.3	8.1	14.3	9.2
고졸	24.7	13.2	40.2	44.3	22.7	12.4	18.2	9.1	16.4	10.6
대졸이상	40.7	26.1	59.7	41.2	34.9	23.6	29.2	20.9	24.7	25.8
1986년										
중졸이하	46.6	19.9	53.5	87.2	37.6	22.3	31.4	16.4	27.2	17.4
고졸	75.3	22.8	64.5	56.8	43.4	23.9	32.5	17.9	30.4	21.5
대졸이상	64.0	55.0	99.3	75.0	60.8	37.6	41.7	41.4	44.4	14.4
연평균증가율(%)										
1975년~1980년										
중졸이하	54.3	57.8	47.5	78.9	46.0	72.3	55.8	50.4	49.8	67.6
고졸	46.8	40.0	39.6	110	40.5	37.7	47.4	42.8	49.8	53.1
대졸이상	54.7	46.9	40.9	45.9	35.8	41.3	52.1	72.9	62.3	94.7
1980년~1986년										
중졸이하	20.0	14.9	9.3	38.8	13.5	14.3	18.5	17.1	15.0	14.9
고졸	34.1	12.1	10.1	4.7	15.2	15.5	13.1	16.1	14.2	17.1
대졸이상	9.5	18.5	11.1	13.7	12.4	9.9	7.1	16.3	13.3	-7.4

『노동통계연감』, 노동부

\* 월평균임금은 특별급여액을 포함한 것임

\*\* 1975년도 자료에는 ‘중졸이하’가 아니라 ‘국졸’, ‘중졸’로 나오므로 ‘중졸’만 사용함.

같이 최근의 物價安定趨勢는 정부의 물가안정정책과 저수준의 수입품가격과 더불어 생산성을 차감한 노동비용이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달성되었다고 하겠다.

勤勞者 賃金狀態를 職種別로 보면 교육수준 등의 여타의 조건이 같을 때 生産職과 事務職勞賃이 專門職과 管理職勞賃보다 상당히 낮은 상태로 장기간에 유지되어

〈表 10〉賃金階層別 全産業의 男・女 勤勞者 分포도

%

賃 金 階 層	근로자총수		남 자		여 자	
	1980	1986	1980	1986	1980	1986
10만원미만	40.0	2.0	17.0	1.0	77.0(75.0)	5.0(79.0)
10만원이상~30만원미만	51.0	61.0	70.0	47.0	23.0(17.0)	89.0(50.0)
30만원이상~50만원미만	7.0	27.0	10.0	39.0	0.0( 2.0)	5.0( 6.0)
50만원이상~80만원미만	2.0	8.0	3.0	10.0	0.0( 1.0)	1.0( 4.0)
80만원이상		2.0		3.0		0.0( 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39.0)	100.0(34.0)

『노동통계연감』, 노동부

\* ( )안의 숫자는 각 임금계층에 있어서 근로자 총수에서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表 11〉農家와 都市勤勞者家口의 所得比較

천원

년 도	가구당 명목소득		1인당 명목소득	
	농 가	근 로 자	농 가	근 로 자
1970	256	292	44	55
1975	873	786	157	152
1980	2,693	2,809	536	619
1982	4,465	3,805	921	867
1983	5,128	4,368	1,082	1,006
1984	5,549	4,828	1,214	1,139
1985	5,736	5,172	1,298	1,237
1986	5,995	5,772	1,397	1,459
1987	6,535	6,740	1,575	1,643

『도시가계연보』, 경제기획원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농수산부

왔다(〈表 9〉). 大卒以上の 근로자의 노임이 中卒의 근로자노임보다 훨씬 높으며 이 상태는 생산성의 차이를 일부 반영함에 기인한다고 보겠다. 한가지 특징적인 것은 男子勤勞者가 女子勤勞者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전문 기술직중에서도 같은 대졸이상의 남자노임이 1986년에 월 64만원임에 비해 같은 자격을 가진 여자노임은 55만원에 불과하다.

1980년에 있어서 70%의 남자근로자는 평균 월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의 노임계층에 있었고, 1986년에는 약 47%의 근로자가 분포되어 있었다(〈表 10〉). 이에 비해서 여자근로자들은 1980년에는 10만원미만에 78%, 1986년에는 5%로 저하되었다. 근로자의 임금분포가 1986년에 상당히 상향된 것같이 보이나 1980~1986동안 소비자물가지수로 측정된 물가상승율은 68%임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賃金階層의 분



布變化는 거의 없다고, 다시 말해서 적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도 특징적인 것은 여자가 일반적으로 낮은 임금계층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1人當 農家와 都市勤勞者의 家口當 所得을 비교할 때 1人當 名目所得에 있어서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변화했으며 1986년부터 도시근로자가 농가의 명목소득보다 높은 비율로 성장하고 있다(〈表 11〉). 따라서 農家所得이 근로자와 비근로자를 포함한 全都市의 1人 所得보다 훨씬 낮은 상태이다 하겠다.

#### 4. 所得分配

所得分配狀態를 측정하는 한 지수인 지니係數(Gini Coefficient)를 보면 1965년에는 0.33이었던 것이 1980년에는 0.39로 상승되었고 그후 1985년에는 0.36으로 낮아지고 있다. 도시나 농촌의 지니계수도 이와 같은 추세를 따르고 있다. 또한 하위 20% 소득계층의 소득분배몫에 대한 상위 20%계층의 소득몫의 비율도 1965~1980년까지는 저하되었다가 1985년에는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表 12〉). 지니係數와 所得占有率의 추세는 1965~1980년까지는 소득분포가 나쁜 방향으로 진행된 상태였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 개선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1965~1980년과 1980~1985년의 두 기간에 있어 지니계수의 차이(0.03)와 점유비율의 차이는 통계추정치가 가지고 있을 오차를 감안할 때 극히 적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965~1985년동안 소득분배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국민소득계정에 나타난 요소소득구성을 볼 때 被傭者報酬의 몫의 비율은 상승추

〈表 12〉 階層別 所得分配

	1965	1970	1975	1980	1985
상위 20%소득점유율(%)	41.8	41.6	45.3	45.4	43.7
하위 20%소득점유율(%)	5.7	7.3	5.7	5.1	6.1
Gini 계 수	0.344	0.332	0.391	0.389	0.363

Suh, S.M. and H.C. Yeon(1986), 경제기획원

〈表 13〉 産業別 被雇傭者 所得分配率의 變化推移

	72~76 평균	77~81 평균	82~86 평균	85	86	87
농 립 어 업	10.3	12.0	14.1	13.7	14.4	14.1
광 공 업	48.6	56.7	58.0	58.8	56.4	56.6
서 어 비 스 업	38.0	47.8	46.9	46.9	47.0	46.3

『국민계정』과 『경제통계년보』, 한국은행

\* 소득분배율은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계에 대한 피용자보수의 비율임.

세를 나타내고 있어 1970년의 30.9%로부터 1987년의 44%로 되었다. 被傭者報酬는 1970~1980년동안 년 15.7%로, 1980~1987년의 기간에는 年 23.9%로 성장하는 반면에 營業剩餘는 1970~1980년동안에 年 9.4%로 1980~1987년의 기간에는 年 20%로 성장하고 있다. 農・鑛工業部門에서는 피용자 몫의 비율이 상승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서어비스업부문에서는 최근에 와서 다시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表 13〉). 이와 같은 피용자 소득분배 추세는 勤勞者와 自家運營에의 所得分配가 개선되고 있음을 지적해 준다.

### Ⅲ. 均衡과 衡平의 문제

제 2 장에서는 한국경제의 변화추세를 成長과 均衡問題에 관련된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고찰하였다. 이제 우리경제의 변화가 産業間・階層間에 相互均衡(balance)을 이루면서 성장을 했는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一國의 경제행위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조건에 따라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상태하에서는 일정한 상품의 가격이나 생산요소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형성된다. 需要는 수요자의 상품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고 供給은 공급자의 의향을 반영하므로 자유로운 市場經濟下에서는 均衡의 問題는 원칙적으로 야기되지 않는다. 시장경제에서 산업간, 지역간, 기타부문간의 均衡이 형성되어 있는가 아닌가는 동일한 생산요소가 모든 분야에서 동일한 보수를 받고 있는가에 의해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상품의 가격이 지역간이나 시장간에 따라서 다르냐 다르지 않느냐에 따라 부문간에 均衡이 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생산요소나 상품이 부문간에 가격차이가 있으면 생산요소나 상품이 가격차이가 해소될 때까지 이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인센티브를 따른 이동을 통해 일정한 상품의 가격은 모든 부문간에 均一化되게 된다. 그러나 政府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간접적으로 市場에 介入하거나 기업이 개개인의 경제행위에 간접적으로 干涉하는 狀態下에서는 가격이 시장의 需要와 供給條件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가격이 모든 부문에서 동일하다는 정보만으로 산업간・부문간의 균형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政府의 干涉度가 높은 경제하에서 경제의 부문간 균형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와 파라미터를 찾아내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1967~1987년동안 전반적으로 말해서 정부의 規制와 干涉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컸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가격 또한 경제단위의 욕구를 정확하게 반영했다고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産業間・部門間 均衡狀態를 논의함에 있어서

가격과 다른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시된다. 우리의 논의를 간편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總體的 經濟의 變動이 소수의 特定部門이나 經濟單位の 變動에 크게 의존할 때 部門間的 均衡은 낮다고 정의한다. 경제전체의 결과가 특정한 부문에 의해서 좌우될 때 특정한 부문의 상황이나 변화에 따른 충격이 경제전체에 일률적으로 미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부문이 자기 나름대로 변동할 때 다른 부문에서 오는 충격을 상쇄할 확률이 높아 총체적으로 충격은 약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정의는 국민전체의 效用이 平均的인 量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隔差에 따른 危險度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때 多邊的인 조합(diversified combination)은 期待效用을 극대화한다는 토빈형의 이론에서도 수용할 수 있다.

### 1. 國際間的 均衡

우리나라의 경제는 수요면에서 海外輸出에 높게 의존하고 있다(1985년에 실질輸出의 GNP對比는 37%). 공급면에서도 전산업에 있어서 수출액의 총산출액(gross output)에 대한 비율은 1975년에는 12.4%였으나 점차적으로 상승하여 1985년에는 14.5%에 달하였다. 1985년의 14.5%는 일본의 7.1%보다 높다. 특히, 수출의 공산품 총산출에 대한 비중은 상당히 높은 20%이상의 수준에 있다. 수출시장은 세계각국에 正常的的(normally)으로 分布되어 있지 않고 美國市場에 集中되어 있어, 해외시장의 분포는 편중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특수한 자본재・부품재를 가지고 생산하는 기술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수출을 위한 생산을 함에 있어서도 일본의 조건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을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輸出市場과 技術條件으로 판단할 때 우리의 국제무역 특히 수출의 측면에서 위험이 낮은 균형상태에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더우기 대미무역에서는 흑자를 일방적으로 지속시킴으로 인하여 韓美間的 貿易摩擦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國際貿易構造에서 不均衡性을 예시한다고 하겠다.

우리의 對美換率は 1965~1985년까지 일률적으로 切下되었으며, 1986년과 1987년의 切上에도 불구하고 實質有效換率は 切下된 상태였다. 이자율이나 금융융자면에서도 수출을 지원하는 이자금융과 정책금융이 있는 반면에 수입을 유도하는 금융정책은 수출증진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이거나 혹은 全無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정책적변수가 수출에만 일방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경제가 輸出部門과 非輸出部門間에 不均衡要素를 가지고 성장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 2. 所得分配의 均衡

對內的으로 不均衡狀態는 農業과 製造業間의 不均衡과 所得分配上의 不均衡으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生産構造面에 있어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고 제조업의 비중은 높은 상태이다. 이같은 산업구조는 정부의 輸出強調政策에 의하여 크게 영향받아서 형성되었다. 결과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需要充足을 해외의 공급조건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따라서 세계농산물시장의 예측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한 충격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人當 농촌의 명목소득이 도시근로자 명목소득과 거의 같다. 도시에 있는 비근로자의 소득을 고려할 때 수출에 영향을 크게 받은 도시경제가 농촌경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갖고 있을 것이다. 지역경제간의 所得隔差는 지역간의 不均衡이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지니계수의 추세로나 요소소득분배율 추세로 볼 때 所得分配度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물가가 안정되고 중졸이하의 근로자의 노임상승율이 대졸이상의 근로자의 노임상승율보다 높은 상태임을 감안할 때 소득분배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는 할 수 있다.<sup>2)</sup> 그러나 소득중 보고되지 않은 地下經濟에 있는 私債利子를 포함한 소득을 감안하지 않고 더우기 보고되지 않고 있는 소득이 부유층과 관계가 있을 확률이 높다.<sup>3)</sup> 이와 같은 통계추정상의 관점에서 지니계수는 所得分配度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지니계수를 추정함에 사용된 소득은 현재 일정한 기간동안 달성된 소득(income flow per unit of time)이다. 소득은 人間資本과 資産資本에 대한 과실(yields)이다. 소득의 원천인 資産의 分布는 正常的으로 分配(normal distribution)된 현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산분포가 극히 소규모의 일부 계층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다. Tait, Faira, Heller(1980)의 IMF조사팀은 1976~1978년 사이에 總家口의 1%가 總個人資産의 32%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人間資本의 蓄積 역시 소수에 한정되어 편중적으로 蓄積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계층간의 소득분배를 자본과 자산에서 나오는 결과라는 관점에서 판단할때 1980년에 소득분배가 개선되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아도 큰 오류는 없을 것이다.

2) 韓國의 所得分配과 관련된 자세한 論議와 問題를 위하여 金迪教(1987), 李俊求(1987), 金大模(1986)와 劉鍾九(1987) 參照.

3) 地下經濟의 活動과 規模에 대하여 崔洸(1987) 參照.

### 3. 勞賃隔差

學力別・性別・職種別 賃金隔差를 비교할 때 학력별・성별・직종별 임금은 상당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같은 자격을 가진 男・女에 있어서 여자의 노임이 상당히 낮고 더우기 같은 자격을 가진 노동자가 직종에 따라서 받는 노임이 상당히 다르다. 이는 노임구조가 노동자의 생산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보다는 형식적인 요소에 많이 좌우되고 노동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지적해 준다. 따라서 노동시장이 불균형상태로 존속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경제는 輸出과 內需産業間, 農業과 製造業間, 所得分配, 勞賃構造에 있어서 不均衡狀態(unbalanced state)를 가지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어떠한 要因이 그러한 不均衡狀態를 가져오게 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의문에 대해 경제・사회・정치적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巨視經濟政策的 側面과 意思決定의 側面에서 그 이유를 찾고자 한다.

### 4. 經濟政策

1960~1980년 동안에는 價格과 勞賃은 정부의 간섭으로 인하여 수요와 공급의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고정되고 변동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고용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경제성장목표율을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의 달성을 위한 투자를 국내저축과 해외차입에 의해 실현되게 계획되었다. 개발초기에는 자본시설이나 사회간접자본이 낮기 때문에 投資要求額이 國內貯蓄額을 초과하게 되었다(<表 14>). 이에 따라 외채증가는 불가피 하였다. 1980년대초 國際金利上昇과 原油價引上으로 인하여 다른 채무국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외채에서 오는 부담은 수출면으로나 경제규모에 비하여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外債負擔의 過

〈表 14〉 對GNP 投資率과 貯蓄率

%

계 획 기 간	국내총투자율	국민저축율	민 간		정 부	해외저축율
			민	간		
67~71 평 균	25.4	15.4	9.6		9.0	10.1
72~76 평 균	27.0	20.4	10.5		3.9	6.7
77~81 평 균	31.0	25.5	19.5		6.0	5.6
82~86 평 균	30.3	27.1	20.3		6.8	3.2
87	29.8	35.6	28.6		7.0	-5.8

『경제통계년보』, 한국은행

〈表 15〉 輸出의 外貨稼得率 變動推移

10억불, %

	1970	1975	1980	1985	일본(1985)
수출액	376	2,824	12,467	27,717	48,174
수입유발액	99	1,019	4,761	5,573	5,573
외화가득액	276	1,305	7,707	17,414	42,601
외화가득율(%)					
전산업	(73.6)	(63.9)	(61.8)	(62.8)	(88.4)
농림어업	—	(82.7)	(80.3)	(82.4)	—
경공업	—	(61.7)	(59.8)	(61.3)	—
중화학공업	—	(51.2)	(55.2)	(56.6)	—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 외화가득율=(수출액-수출에 따른 수입유발액)/수출액

重性和 價格技能의 重要性을 인식하고 物價安定과 貯蓄率提高 政策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점차적으로 무역수지흑자화를 실현하는데 성공하였다. 價格과 貯蓄을 강조하는 점에 있어서 1980년대와 1970년대의 정책이 다르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경제개발초기부터 현재까지 經濟政策은 輸出增進을 통한 成長을 달성함에 주안점을 두고 수립되었다. 따라서 해외시장변화에 따라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출산업은 육성되도록 조치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國內投資政策 역시 수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고 政府의 金融支援과 換率支援 등의 諸政策이 구체적으로 수출을 위하여 수립되었다. 정부의 정책이 수출을 통한 총체적 경제성장의 목표달성에 주력한 결과 高度의 經濟成長과 貿易收支改善을 달성하는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產業構造가 수출위주의 구조로 변화되고 내수산업이 같은 속도로 성장되지 못한 실정이다. 日本의 경우 수출산업을 중요시하더라도 내수산업과 수출산업이 동시에 자라는 산업구조가 형성되었는데 한국의 경우에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이 균형있게 발전되지 못한 理由는 무엇인가? 이는 輸出產業構造가 중간재수입을 유발하는 輸入依存度가 낮은 農業部門(2%)으로부터 높은 製造業(22%)部門으로 변천된 사실에 있다. 중간재수입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외국산업과의 기술적인 연관성이 높고 원자재사용이 불가피하므로 수출의 효과가 내수산업에 적게 나타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수출의 外貨稼得率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表 15〉). 輸入依存度가 높은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에 수출산업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外貨稼得率이 1970년의 73%로부터 점차적으로 低下되어 1985년의 63%선의 낮은 수준에 있다(日本의 수출의 외화가득율: 88.4%). 수입의존도가 높고 외화가득율이 낮은 產業部門에서 輸出이 신장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자체의 技術과 資材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미비한 상태에

〈表 16〉 技術導入 狀況

전수

		'62~76	'77~86	'87	누 계
업 종 별	농 축 산 업	6	20	3	29
	경 공 업	81	393	87	561
	중 화 학 공 업	595	2,580	489	3,664
	사회 간 접 자 본	70	310	58	438
합 계		752	3,303	637	4,692
국 별	미 국	164 (22)	817 (25)	180 (28)	997
	일 본	494 (66)	1,605 (49)	308 (48)	2,407

『재정금융통계월보』, 재무부, 1988.4

\* ( )안은 구성비(%)를 표시함.

〈表 17〉 輸出企業과 內需企業의 生産性과 收益性의 變化推移

%

	72~76 평 균	77~81 평 균	82~86 평 균	85	86	87
종업원 1인당 생산성						
수 출 기 업	25.1	27.9	10.5	9.1	14.5	23.4
내 수 기 업	24.5	19.2	11.5	9.3	12.9	13.7
매 출 액 순 수 익 성						
수 출 기 업	3.8	0.0*	1.4	1.3	2.3	2.0
내 수 기 업	4.5	1.2	1.1	1.0	1.7	1.8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 '73년부터 '76년까지의 4개년 평균임.

서 제조업 특히 重化學工業이 育成되어진데 있다.<sup>4)</sup>

현재, 주요수출산업의 技術導入은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지만(〈表 16〉), 만약 우리경제가 자체내에서 제조품 수출산업에 필요한 기술과 가공품을 동시에 개발하려고 했더라면, 수출산업의 발전은 기술개발을 강조하는 中小企業을 포함한 內需産業의 發展을 유발시켜 내수산업과 수출산업간에 어느 정도의 균형이 이루어졌으리라고 기대된다.

제조업을 주축으로 하는 수출산업은 對外指向的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生産力과 競争力의 면에서 농업과 내수산업에 비해 유리하다(〈表 17〉).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제조업의 발전속도는 클 것이며 농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내수산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됨을 면하기 어렵다. 정부가 농업과 내수산업의 낙후가능성을 인정

4) 輸出依存性과 技術導入의 現況에 관한 情報을 위하여 韓國銀行, 調查統計月報(1988.3)와 週刊内外經濟(1988.6) 參照.

하여 제조업육성 못지않게 그 부문에 정책적으로 지원을 했더라면 수출산업과 내수 산업간에 존재할 수 있는 갭을 어느 정도 축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정책이 산업간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이었더라면, 輸出産業과 內需産業間 그리고 大企業과 中小企業間, 都市와 農村間에 존재하는 所得隔差는 낮아졌을 것이다. 정부가 낙후된 산업에 투자를 확대하여 수출산업과 내수산업간에 상호보완적인 체계를 이룩하도록 정책을 취했다 하더라도 우리 상품생산이 해외기술과 부분품에 의존하는 이상 수출산업이 내수산업에 비해 더 성장된 산업구조로 가는 과정을 피하기는 어렵다고(costly) 본다.

### 5. 政策決定過程

경제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기업 그리고 개개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정책결정을 한 것이 경제의 불균형적 요소를 양출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보고 싶다. 우리 경제개발초기부터 1970년후반까지는 경제가 구조적으로 단순하고 모든 국민이 소득증가를 일률적으로 원하는 상태였다. 따라서 成長爲主로 하는 政府主導的인 意思는 국민전체의 의견과 합치한다고 하겠다. 소득신장을 강하게 원하는 단계에서 단독적인 결정은 迅速性을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는 소득수준도 어느 정도 상승했을뿐 아니라 기업간, 산업간 그리고 개개인의 이해도 상이한 단계에 이르렀다.

만약 1970년대 후반에 있어서 경제정책결정에서 낙후된 산업의 이해를 보다 크게 반영했더라면, 우리 경제의 産業間 構造는 보다 더 균형적 발전을 이루었을 것이다. 정부가 복잡다단하게 의존하고 있는 경제의 운용에 있어서 가격의 역할을 저평가하고 가격의 자율적인 조정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시장조건에 따른 생산요소의 가격, 임금, 이자율 등은 경제운영에 필요한 정확한 신호를 제공한다. 정부가 가격이 주는 정보 등의 經濟情報를 민간보다 더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는 假定은 경제가 복잡화되고 국제화되고 있는 단계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이 가정이 정부의 의사결정에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되며 이것이 간접적으로 우리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한 또다른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 Ⅳ. 向後の 課題

우리경제의 초기발전단계에서는 상당히 낮은 소득수준상태에서 정부가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수출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수출산업의 신장을 통하여 경제발



전을 추구한 것은 수긍될 수 있다. 그러나, 技術의 對外依存性이 강한 輸出産業의 발전을 획일적으로 추진한 成長政策은 산업간의 불균형상태를 야기시키고 이에 따른 생산요소의 보상에 대한 큰 격차를 유발할 수 있다. 산업구조와 소득분배가 소수의 산업과 계층에 편중된 것은 다수 산업과 계층에 균등하게 분포된 것보다 예상 못한 충격을 흡수할 능력을 적게 만든다. 따라서, 특정산업의 육성을 통한 成長政策은 경제단위간의 이해관계의 상충을 유발하여 경제성장에서 기대되는 후생향상을 달성함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현재, 한국경제는 小規模의 交易國이 아닐 뿐만 아니라 貿易收支黑字基調를 형성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경제이다. 따라서, 종래의 수출에 편중되고 수입억제적인 경제구조와 행위는 외부경제와의 충돌을 야기시켜 우리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할 요인이 된다. 따라서, 우리경제는 對內的으로 각각의 경제단위가 경제발전에 충분히 參與하고 경제발전으로부터 오는 生活水準의 向上을 향유할 수 있게 하고 對外的으로는 세계경제의 일원으로서 세계경제의 발달에 적극적으로 參與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sup>5)</sup>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존재하는 산업간에 상호의존적인 관계 아래서 가장 효과적인 경제운영은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정부, 기업, 개인 각 단위가 각각 比較優位에 따른 分業의 原則에 입각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정부의 비교우위는 기업과 개인의 활동을 조장하고 개인간의 이해상충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에 있으며, 기업은 생산관리에 우월성이 있고, 개인은 노동을 제공하고 소비생활을 결정하는데 비교우위가 있다. 分業에 따른 責任遂行은 산업간 계층간의 불균형과 이에 따른 마찰을 극소화하고 국가전체의 효용을 증진시키게 될 것이다.

분업원칙에 입각하여 수행되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직접적으로 특정한 산업을 지향한 정책이 아니고 간접적이고 모든 경제단위에게 균등하게 영향을 주는 정책이어야 한다. 이렇게 운영할 때 필수적인 것은 價格技能이 強化되어야 하는 것이며 정부는 市場失敗에서 오는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민간의 경제활동에 간섭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은 經濟의 都市化에서 비롯되는 公害 등의 解消, 공업화에 따른 工場環境의 條件改善,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분야 예를 들면 教育, 交通, 上下水道, 醫療 등에 과거보다 더 큰 비중을 두고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제 우리경제의 성장의 불균형상태를 저하시키는데 필요한, 전통적으로 이용되는

5) 韓國經濟가 當面課題에 대해서는 趙淳(1987), 轉換期에 있어서 經濟開放方向에 대해서는 羅雄培(1988) 參照.

가격안정정책 등 이외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경제의 산업간 불균형과 소득·노임의 격차는 우리자체의 연약한 技術水準과 人間資本의 分布에 관계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균형적인 산업구조와 이에 따른 만족스러운 소득분배를 위해서 個個人の 勞動資本의 向上은 필수적인 것이다.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함에 필요한 教育의 機會를 갖도록 하는 것은 성장을 위한 잠재력향상과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을 받을 능력과 기회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교육기회를 실제 이용하기 힘든 없는(have not) 구성원에 대해서는 정부나 사회가 그들로 하여금 실제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教育補助金, 教育支援制度 등이 있어야 하겠다.

內生的으로 새로운 知識과 技術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특히 大學教育機關등의 研究設備擴張과 연구할 誘因을 提供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미래에 主產業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尖端技術產業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이 필요하다. 경상수지흑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美國으로부터 교육연구기자재를 도입하는 것은 무역마찰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 역시 연구개발투자를 적극확대해야 한다. 이에 못지 않게 기업에 고용된 피고용자에 대한 教育投資, 再教育, 教育機會支出 등을 통한 교육지원은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하겠다. 이것은 被雇傭者の 厚生水準을 向上시키고 기업자체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로, 우리경제는 雇傭效果가 큰 농업부문으로부터 雇傭創出度가 낮은 제조업 부문으로 이전해 가면서 資本—技術集約的인 構造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GNP當 雇傭創出效果는 저하될 추세이다. 따라서, 고용기회의 저조는 소득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의 불안정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집약적이고 새로운 기술창조적인 중소기업이나 농업부문의 활성화는 고용과 사회안정차원에서도 필요시 된다. 물론, 중소기업과 농업부문육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은 필요시되지만 이에 못지 않게 필요한 것은 技術에 대한 情報과 필요한 技術을 최소의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이다.

세째로, 정부의 지출면에서 볼 때 教育・醫療・福祉에 대한 支出은 정부소비지출의 25%선상에 있다(<表 18>). 개인당 소득수준의 증대에 따른 복지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킬 정도로 상승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재정규모에 대한 福祉・教育施設比率이 증대되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內國稅入構造는 間接稅 비중이 높고 특히 財産稅와 利潤에 대한 租稅는 극히 낮은 수준에 있다. 따라서 현존하는 조세구조는 소득분배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조가 아니다. 따라

〈表 18〉教育福祉支出과 內國稅의 變化推移

억원

	1970	1975	1980	1985	1986	1987
교육복지지출	—	2,479 (22)	9,995 (23)	20,370 (25)	23,191 (25)	27,388 (25)
내국세	2,838	10,123	36,758	74,970	84,640	100,120
직접세	1,386	3,809	11,788	26,714	30,464	39,245
소득세	845	1,986	6,614	14,816	17,846	21,589
법인세	424	1,305	4,852	11,267	11,914	16,824
상속세	15	108	96	464	644	697
자산재평가세	7	51	224	167	60	135
간접세	1,416	5,687	24,040	45,570	51,279	57,358

『재정관련 통계집』, 경제기획원

『경제통계연보』, 한국은행

\* 교육복지지출은 정부소비지출중 교육, 보건, 사회복지 및 복지 그리고 주택환경개선비용을 포함함. 괄호내의 수치는 총정부지출에 대한 비율임.

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근로의욕을 상승시키도록 所得稅率은 下向調整되어야 하고 재산소득에 대한 稅率은 上向調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서 현재의 市場價格대로 資產을 評價하여 租稅稅源의 擴張을 달성하고 이에 따른 稅入의 增加는 國內福祉支出로 활용되어야 하겠다. 물론, 자산세, 증권투자세 등의 稅率이 낮은 것은 증권시장의 발전이나 저축장려라는 관점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에 따른 所得分配不均衡은 우리경제의 均衡的 成長과 국민의 福祉를 낮출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시정되어야 한다. 적어도 租稅率은 소득의 원천에 무관하게 같은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稅率이 부과됨이 타당한 것이다.<sup>6)</sup>

네째로, 이때까지 우리경제의 성장은 量的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양적 성장에 부수될 수 있는 公害나 環境汚染 등의 質的인 측면을 상대적으로 등한시하였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경제의 質的인 成長을 강조함으로써 실질적 所得向上을 느낄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스럽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해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重化學工業部門은 생활의 질적 향상에 큰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택됨이 필요하다. 경제의 질적 성장과 더불어 지적되어야 할 것은 우리나라에 현존하고 있는 勤勞者에 대한 機會와 補償의 性別에 따른 差別의 내우는 시정되어야 한다.

다섯째로, 현재까지 輸出의 重要性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輸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意識構造를 가지고 있다. 經濟單位의 福祉는 경제단위가 모든 치분가

6) 資產所得稅와 財產所有의 偏重性에 대하여는 宋鍾來(1984) 參照. 每日經濟新聞(1987. 7. 6)은 서울市民의 上位生活者 5%가 서울전체 土地面積의 60.7%를 소유하고 있으며 上流層 一人當 平均 土地所有額은 약 18億원이라고 보도하였다.

능한 상품, 즉 국내상품이든 해외상품이든 상관없이 合理的으로 자기들의 嗜好에 따라 選擇할 수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輸入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意識은 是正되어야 한다. 최대한도로 輸入規制措置 등은 除去되어야 하고 輸入自由化는 적극적으로 推進되어야 하겠다.<sup>7)</sup> 왜냐하면, 輸入의 自由化는 개개인에게 選擇할 機會를 준다는 면에서 뿐만 아니고 우리경제가 輸出을 持續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수출·수입의 相互增進은 國際間的 不均衡을 解消하는 槓桿이 됨은 再論할 필요가 없다.

## V. 맺는 말

우리경제는 역사상 유래없는 짧은 20~30년의 기간에 高度의 成長을 이룩하고 괄목할 만한 經濟構造의 轉換을 달성하였다. 더우기 점차적으로 貿易收支黑字基調가 정착됨에 따라 國際收支도 改善되었고, 따라서 高成長·低外債의 경제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성과가 限定된 資產으로 短期間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도시와 농촌경제, 가진자와 없는자간에 바람직스럽지 못한 관계를 가지게 됨을 피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不均衡(unbalanced)이 내포된 成長은 輸出主導의 工業化政策에도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보다도 본질적으로는 不均衡成長의 원인은 우리경제가 생산에 필요한 技術資源의 對外依存性을 低下시키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우리경제자체가 高度의 技術과 知識을 소유하였거나 개발하였더라면, 輸出의 增加는 국내의 여타 內需産業과 中小企業을 육성하고 所得分配度가 보다 정상적인 型으로 진척시킬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知識과 技術의 內生的 발전을 위하여 研究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야 하겠고 모든 사람이 能力에 맞게 均衡한 教育機會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 더우기 雇傭과 社會安定의 차원에서도 勞動集約의이고 技術創造的인 中小企業과 農業部門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시된다 하겠다.

經濟의 不均衡의 發展을 피하기 위해서 종래의 政府主導인 意思決定을 탈피하고 民間이 政策決定에 참여함이 實질히 요구된다. 經濟의 運用に 있어서도 政府, 企業, 個人間的 比較優位에 따른 分業의 原則에 입각하여 가격기능을 강화하고, 정부는 市場失敗에서 오는 사회적 폐해를 最小화하는 범위내에서 民間의 經濟活動에

7) 韓國銀行, 週刊內外經濟(1988.5)에 의하면 우리나라 市場은 상당히 높게 開放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非關稅障壁 등으로 실제적인 輸入自由化의 程度가 높은지에 대하여는 疑問點이 있다.

간섭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政府支出에 있어서는 福祉・教育施設比率이 상승되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하다.

한편, 과거 70년대의 高度의 不安定의인 物價上昇과 經濟活動圈의 급속한 팽창은 資産資本分配을 不均衡하게 하였다. 이 資産의 非正常的의 分布가 장래의 기대되는 所得分配가 不均等하게 될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 이와 같은 인식은 社會의 不安과 未來에 대한 不確實性을 양립시킴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기반 구축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따라서 근로자가 저축할 수 있도록 勤勞所得稅率을 下向調整하고 資産所得稅率을 上向調整함이 필요하다. 더우기 경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도록 公害나 工場環境 改善에 정부의 노력이 필요시되며 性別에 따른 差別대우는 제거되어야 하겠다. 輸出爲主로 성장하는 산업구조와 美國에 偏重된 수출시장구조는 흑자기반이 구축된 이 단계에서 國際間의 不均衡을 가져오고 貿易摩擦을 深化시키게 된다. 국제간에 존재하는 불균형적 양상은 輸出・輸入의 同時的 成長을 통하여 시정되어야 될 것이며 輸入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意識은 시정되어야 한다.

經濟理論의 發展過程을 보아도 아담 스미스의 成長을 강조한 이론에 이어 제임스 밀의 所得分配理論이 뒤따라 나왔다. 政府의 少極의 役割을 강조하는 古典經濟學說에 이어 정부의 積極의 參與를 강조한 케인즈이론이 나왔다. 케인즈이론이 50여년간 巨視的 成長과 雇傭解決에 기여했으나 이론의 실제적 적용시에 수반되는 인플레이션과 微視的 效率性의 低下는 또 다시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각 경제단위의 自律性을 강조하는 이론적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經濟理論 發展過程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成長과 分配, 巨視的 안목과 微視的 안목이 시간적으로 상호교환적으로 대두되는 현상임을 지적해 준다.

우리경제는 成長에 수반되는 國際間과 國內에서 分配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분배상의 문제는 우리경제에만 야기된 특수문제가 아니고 성장의 궁극적 목적인 福祉增進을 이루는 過程에서 야기되는 問題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成長을 위한 分配, 分配을 위한 成長은 相互補完的 關係에 있고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의 자기 固有의 役割을 전실하게 집행할 때 만족스럽게 성취된다. 개인, 기업, 정부의 各 經濟單位의 運營은 合理的 選擇을 바탕으로 해야 하겠다. 합리적 선택은 現時點에서 처분할 수 있는 財貨의 選擇뿐만 아니고 現在와 未來의 選擇도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서 합리적 선택은 經濟單位가 자기의 의향대로 資源을 처분하는 선택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자기뿐만 아닌 다른 經濟單位와 다음 世代가 향유할 수 있는 經濟財를 管理(custodian)한다는 전제아래 행사되어야 할 義務性을 가진 선택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때 合理的인 選擇은 조화스러운 분위기를

조성시키고, 따라서 經濟單位間的 摩擦을 解消할 확률은 높게 된다.

우리경제가 대내적으로 당면한 豊富속에서 産業間・階層間 摩擦과 대외적으로 팽창하는 世界經濟속에서의 摩擦은 우리 개개인 모두가 자기의 所有한 人間資本과 財産資本을 有用하게 管理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投資하고 活用한다면, 보다 쉽게 解決될 것으로 보고 싶다.

### 參 考 文 獻

1. 郭承澤, “美 元貨 질상압력과 韓國經濟”, 韓國經濟新聞, 1987.
2. ———, “美 通商壓력과 韓國의 對應”, 韓國經濟新聞, 1988.
3. ———, “對美貿易摩擦 緩和와 物價安定”, 韓國經濟新聞, 1988.
4. 郭承澤, 李榮善, 『韓國經濟의 構造와 政策』, 韓國經濟新聞社, 1984.
5. 金大模, “開放經濟에서의 所得分配과 經濟成長—1980年度の 韓國을 中心으로—”, 『중대논문집』, 제34집, 1986. pp. 9~28.
6. 金迪敦, “貧困層과 非貧困層간의 所得分配”, 『經濟研究』, 8권 2호, 1987. pp. 23~42.
7. 羅雄培, 『經濟政策과 構想의 大轉換—國際化를 中心으로—』, 1988.
8. 徐相穆 外, 『貧困의 實態와 零細民 對策』, 韓國開發研究院, 1981.
9. 宋鍾來, “社會的 市場經濟體制的 模索”, 『韓國資本主義의 形成과 展開』, 한국정신문화연구소, 1984. pp. 187~237.
10. 劉鍾九, “韓國 都市家口の 福祉厚生不平等”, 『産業과 經濟』, 제24권 2, 1987.
11. 李俊求, “成長과 分配: 쿠즈네츠假說의 再吟味”, 『經濟論輯』, XXVI, 제 1호, 1987. pp. 59~85.
12. 林元澤, 邊衡尹, 趙淳 等, 『韓國經濟의 理解』, 比峰出版社, 1987.
13. 趙 淳, “韓國經濟의 課題와 展望”, 1987. pp. 535~556.
14. 朱鶴中, 『韓國의 所得分配과 決定要因(上)』, 韓國開發研究院, 1979.
15. ———, 『韓國의 所得分配과 決定要因(下)』, 韓國開發研究院, 1982.
16. 崔 洸, 『韓國의 地下經濟에 관한 研究』, 韓國經濟研究院, 1987. 4.
17. 韓國銀行, “1985年 産業聯關表로 본 우리나라 經濟構造”, 『조사통계월보』, 1988. pp. 3~33.
18. ———, “우리나라의 市場開放現況”, 『주간내외경제』, 1955. pp. 14~20.
19. ———, “우리나라의 技術貿易의 推移”, 『주간내외경제』, 1986. pp. 10~17.
20. Tait, A.F. and R. Heller, 『1980年代의 韓國稅制에 관한 IMF報告書』, 1980.
21. Kim, K.S. and J.K. Park, “Sources of Economic Growth in Korea: 1963~1982,”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85.
22. Kuznets, S.,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American Econo-*

- mic Review*, Vol. 45, No. 1, 1955, pp.1~28.
23. Kwack, S.Y., "The role of financial policies and institutions i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and Un Chan Chung process," in H. Cheng(Ed.), *Financial Policies and Reforms in Pacific Basin Countries* (Lexington, MA : Lexington Books, 1986), pp.116~135.
24. Kwack, S.Y., "Policy Analysis with a Macroeconomic Model of Korea," *Economic Modelling*, 1986. pp.175~196.
25. Kwack, S.Y., "Korea's Exchange Rate Policy in a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World Development*, 1, 1988.
26. Lee, J.W. and S.M. Koo, "A Reexamination of the Trade-off Between Economic Growth and Income Equality," *Proceedings of the Second International Convention of Korea Economic Association*, 1986, pp.785~813.
27. Suh, S.M. and H.C. Yeon, *Social Welfare during the Structural Adjustment Period in Korea*, Working Paper 8604,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86.
28. Yoo, J.G. and J.K. Kwon, "Welfare Inequality among Urban Households in South Korea : 1965-1983," *Applied Economics*, Vol. 19, No.4, 1987, pp.497~510.